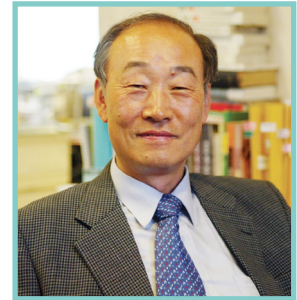


광복 70주년 맞이하여 남북관계, 과학기술협력으로부터 물꼬 트자



글 : 박성현 (parksh@snu.ac.kr)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한반도는 1945년에 광복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되어 70년간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강대국의 이해타산에 따른 결과물로 만들어진 분단국 중 아직도 분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같은 민족으로 장구한 시간 동안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한민족에게 분단 종식은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당위적 명제이다.

2012년에 내려진 5·24조치 이후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치색이 적은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관계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협력이 남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남북이 모두 나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두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과학기술이다. 북한에서도 2013년 11월 13일에 4년 만에 열린 과학자·기술자대회에서 “과학기술에 강성국가 건설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천명하였다. 그동안에는 남북 교류 사업으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구상돼 왔지만, 이제는 남북

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독이 통합되기 전후의 독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인 1987년에 동·서독 과학기술협력조약을 맺고 60여 개의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상호간 정보가 교류되었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통일 후 과학기술시스템의 통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독일은 통일 즉시 동독 지역에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설립하고, 과학자 교류와 연구 인력 재배치도 실행 했다. 이를 통하여 동·서독 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과학기술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현재 과학기술계를 살펴보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없어 보인다.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시작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전 연구가 충분히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남한의 식량 자급률은 24% 수준인데, 북한은 어느 정도인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려면 무엇을 해

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북한의 국가 통계 작성 기준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력 등 에너지 수급 문제, 결핵 등 보건의료 문제, 생태계 보존 문제, 과학기술 인력 양성 문제, 과학기술 용어 통일 문제 등 북한과 접촉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두 번째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분야인 농업, 어업, 임업에서부터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정치논리에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 조직에서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한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주도하거나,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매개체로 남북한 대학들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에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회원으로 입회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소통과 협력을 위한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남북과학기술교류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센터에서 남북한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만나 상호 필요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면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이 자연스럽게 진전될 것이다. 전쟁의 상징인 DMZ가 세계적인 생태계 보존의 보고가 되고,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요람이 된다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 인민의 의료사회보장을 약속하고 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의료기반과 결핵 등 각종 감염성 질환들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

다. 남한 대비 약 11년에 달하는 기대수명의 차이(남한 81세, 북한 70세)와 7배의 영유아 사망률(출생 1천명당 남한 4명, 북한 29명), 3배의 감염병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남한 34명, 북한 117명) 등 지표만으로도 매우 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WHO, 2014). 북한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개선함으로써 향후의 남북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엄청난 통일비용을 줄이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은 통합 16년 전인 1974년에 이미 동서독 보건협정을 통해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는 보건의료의 통합과 통일독일 건설을 촉진한 바탕이 되었다.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은 남북한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건강문제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생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시급한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협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로는 IT 분야의 협력 관계가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하드웨어 중심의 IT 강국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소프트웨어 중심 IT 인력이 우수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한국의 IT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IT 소프트웨어 인력이 만나면 세계적인 IT 파워를 형성할 수 있다. IT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을 제안하면 북한도 응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3월에 박대통령께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선언한 한반도평화통일에 대한 3단계 구상은 매우 적절하다. 그 1단계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이고, 2단계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증산, 보건의료 지원, 홍수피해 등을 막기 위한 산림녹화 등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며, 이는 과학기술협력으로 풀어갈 수 있다.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이제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어나갈 때이다.